

光洲日뢖



"최순실 수사에 검찰 명운 걸어라"

최씨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국민께 죽을 죄 지었다" 울먹 면죄부 수사땐 국정혼란 가중 박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해야

검찰이 지난 31일 오후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 환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하지만,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 이번만큼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최씨의 국정농단 여부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씨를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 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의혹 등 제기된 각종 의혹 전반을 캐묻고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횡령부터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혐의가 10여개안팎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본인의 혐의 외에 공범 적용도 가능하므로검토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씨 본인과 주변 인물은 물론 그동안 이번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다

[3전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얼굴 드러낸 최순실 최순실씨가 지난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자와 안경을 쓰고 도착했다.(왼쪽) 시위하는 시민과 기자단을 거쳐 검찰 청사 안에 들어선 최 씨. 안경과 모자가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는 이들 의혹의 최종 종착지인 박근혜 대 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확산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 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 소하지 못하고 '면죄부용' 수사로 결론을 낼 경우 특검 실시와 국민적 분노로 인한 국정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권에서 벌써 특검 논의가 확산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 날 오전 특검 도입 협상을 새누리당과 재 개하기로 했다. 관련자 사퇴를 요구하며 협상을 중단했던 민주당이 다시 특검을 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 핑에서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 한다는 사명감으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 사 결과를 통해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3백이 밝혀야 한다 그 시작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검 방법·거국내각 '갑론을박' … 혼돈의 정치권

여야 정략에 혼란만 가중

국정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에 정치권이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 시하지 못하면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 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씨 사 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가 안위와 미래를 열어가려는 노력보다는 정 략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최순실씨 국정 농단에 대한 특별검 사 방법론을 놓고 여당은 상설특검을, 야 당은 별도 특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1일 '최순실 특검'과 관련,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기존의 별도 특검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 장이다. 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거국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도 여야 모두 진정성 있는 접근보다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거국 내각은 당초 여권을 압 박하는 야당의 카드였다. 하지만 여당이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나서자 이 제 야당이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여당의 거 국 내각 구성 수용 이면에는 국면 전환 노 립수가 있다는 것이다.

정국 해법 제시 가능성에 주목을 모았던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31일 회 동은 단 10분 만에 결렬됐다.

정치권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 당은 지도부 퇴진을 놓고 친박(친 박근혜) 과 비박(비 박근혜) 진영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야권의 공조도 삐걱대고 있다. 31일 국민의당이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자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양 당은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나타낸 바 있다.

결국,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 치권이 정략적 태도를 보이면서 최순실 사 태의 진상 규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식마서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call) 운영

ኞ 광주광역시 30년

인구 150만 전국 5위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❷ 글로벌 도시 꿈꾸는 광주

1일은 광주가 '홀로서기'를 선언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였던 광주는 지난 19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해 한 단계 위상을 높였다. 이후 9년이 지난 1995년 1월 1일에는 광역시로 바뀌었고, 그해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민선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광주는 직할시를 거쳐 광역시로 변모 하는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광 주의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미래를 내 다본다.

1986년 전라남도서 분리 직할시 거쳐 1995년 광역시로 면적 2배·인구 1.5배 늘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 준비

30년 전만 하더라도 광주는 행정구역 면적이 214.11㎢였으나 지금은 501.15 ㎢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인구는 92만 885명에서 149만647명으로 1.5배 이상 늘어나 호남권 최대도시로 발돋움했다. 〈관련기사 5면〉

예산도 1148억원에서 올해 5조9173억 원으로 52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 도는 41.3%로, 여전히 전국 7개 특·광역 시중가장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는 19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과 대구,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라남도와 분리됐다.

당시 3개 구(區) 72동이었지만, 1988 년 1월1일 광산군 전역을 편입하면서 4

무안공항 어이없는 여객기 결항 ▶6면

자동차 산업 밸리-독일 뮌헨 ▶18면

오키나와 캠프 아기 호랑이들 ▶ 20면

₩ 광주광역시 30년

7 117		
1	1986년	2016년
면적	214.11km²	501.15km²
인구	92만885명	149만647명
예산	1148억원	5조9173억원
자 <mark>치구·동</mark>	3개구·72동	5개구·95동
공무원	2864명	7380명
세대수	20만7797가구	56만9765가구

구 83동으로 늘어나면서 서남권 중추도 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도 2864명에서 현 재 7380명(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2.5 배 가량 늘었다.

세대수는 20만7797가구에서 56만 9765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04.35%에 이르고 있다.

인구는 30년 사이 1.5배가 늘었지만, 한 해 출생인구 숫자는 1986년 1만2555 명에서 2015년 1만2729명으로, 30년 전 에 비해 26명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신생 아 출산이 크게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 고 있는 셈이다. 노인 인구비율은 작년말 11.3%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광주시는 직할시 승격 이후 민선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선 시행 이후 광역도시로서 성장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대거 확충됐고,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 적 개최로 한층 높아진 도시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평가다.

1986년 초대 직할시장은 김양배씨가 맡았고, 현재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11명 의 시장이 광주를 이끌었다. 광주는 1995 년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높은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을 확충해 본격적인 발전기에 접어들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